

<32회 SPRi Forum 발표자료>

한국의 일자리 상황과 새정부의 정책방향

김용기 · 아주대 교수

2017. 7. 4.

Chapter. 1

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

- 과거 수출·제조 대기업주도 경제성장



- 경제성장의 결과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
아니라, 일자리가 늘어 성장이 되는

<2017. 6. 12. 대통령의 국회 추경 시정연설 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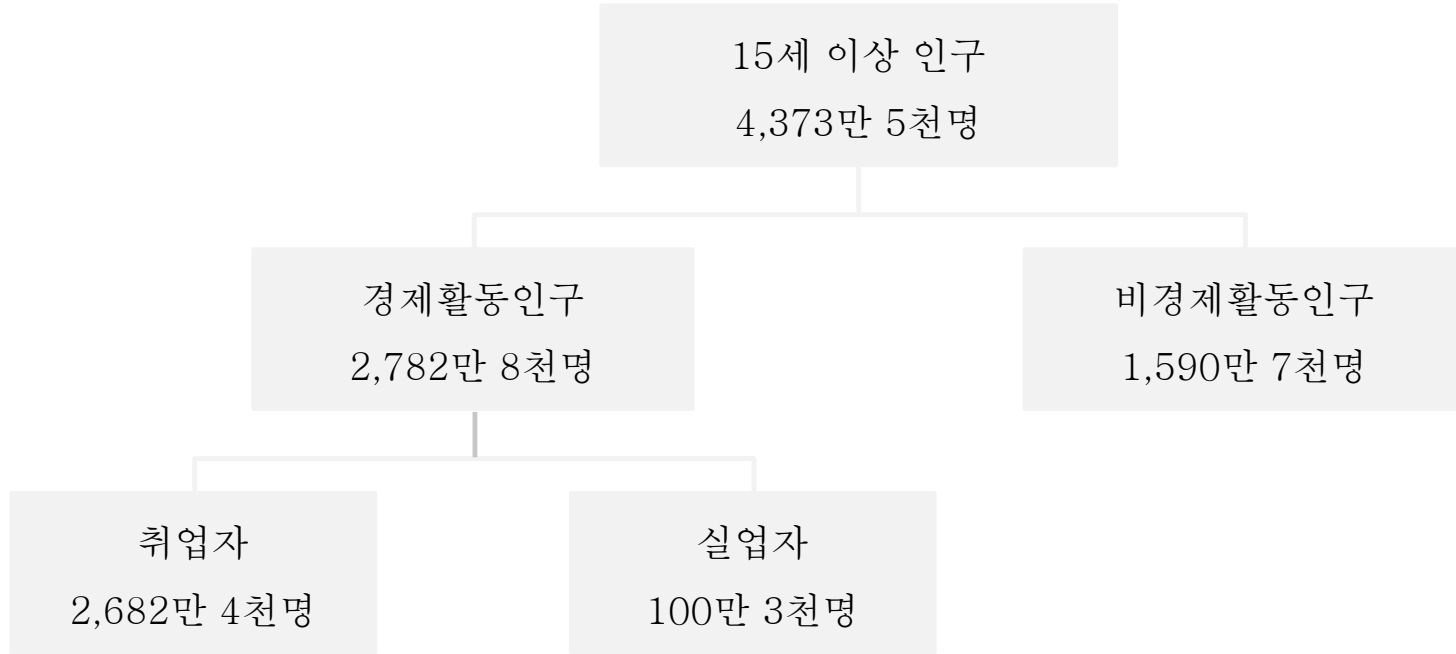
4륜 구동 성장

- 일자리 주도; 소득 주도; 혁신 및 동반 성장
- 줄어든 가계소득: GDP 대비 69.6%(1995) → 64.3%(2013년) vs. 늘어난 기업소득: GNI 대비 16.6%(1995) → 24.1%(201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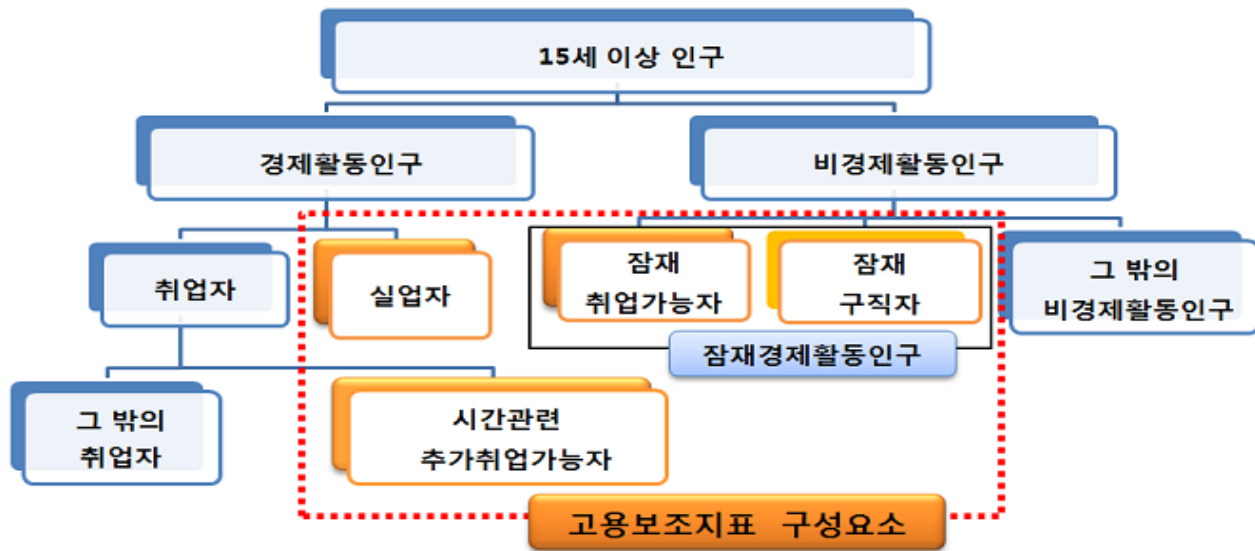
Chapter. 2

한국의 일자리 상황

1) 경제활동인구 구성(2017. 5월 기준)



- 공식 실업률은 3.6%(전년 동월 대비 0.1%p 감소), 고용보조지표3에 의하면 11.0%(전년 동월 대비 0.2%p 상승)



※ 고용보조지표3은 ILO의 권유로 통계청에서 공식실업률과 함께 발표하는 수치로 현재의 실업률이 노동 저활용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

고용보조지표3은 [실업자 +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 + 잠재경제활동인구]/[경제활동인구 + 잠재경제활동인구] x 100

= 11.0% (2017. 5월 현재)

2) 취업자는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자영업자 & 무급가족종사자)로
구성

○ 2682만 4천명(취업자, 2017년 5월 기준)

= 1997만 7천명(임금근로자) + 568.3만 명(자영업자)+ 116만5천명(무급가족종사자)

-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1332만 4천명에 불과
그 외 임시 508만2천명, 일용 157만1천명

○ 임금근로자 중 34.9%*만이 좋은 일자리

: 정규직 + 월 소득 225만원 이상

- 월 소득 225만원은 임금근로자 중위소득 180만원의 125%에 해당

- 소득만 놓고 보면 39.9%가 월 소득 225만 원 이상

(5%p는 비정규직이지만 월 소득은 225만 원 이상)

*2015년 8월 기준

3) 청년 일자리 상황의 심각성

“공식실업률은 11.2%초반이지만,
고용보조지표 3은 22.6%(2015년 8월 현재),
보다 확장된 체감실업률은 34.2%에 달한다.”

- 현대경제연구원

○ 청년 937만 6천명 중 취업자 407만 명, 비경제활동인구 530만명

- 청년(15~29세) 중 공식실업자는 41만 9천 명, 공식실업률 9.3% / 2017. 5. 현재

고용보조지표3 인원은 114만 명 전후,

확장된 체감실업자 수는 179만 2000명/ 2015.8. 현재

* 위의 고용지표 3 + 비자발적으로 비정규직에 종사하고 있는 청년 & 그냥 쉬고 있는 청년

< 고용보조지표로 본 청년실업 현황 (2015년 8월) >

(단위 : 만 명, %)

취업자 (a)	시간관련 추가취업 가능자 (b)	비자발적 비정규직 (e)	실업자 (c)	비경제 활동인구	잠재경 활 (d)	그냥 쉬었음 (f)	체감 실업자 (b+c+d+e+f)	체감실업률 (=보조5) $(\frac{b+c+d+e+f}{a+c+d+f})$
399.0	8.4	45.8	34.5	515.4	70.9	19.7	179.2	34.2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8월)를 활용해 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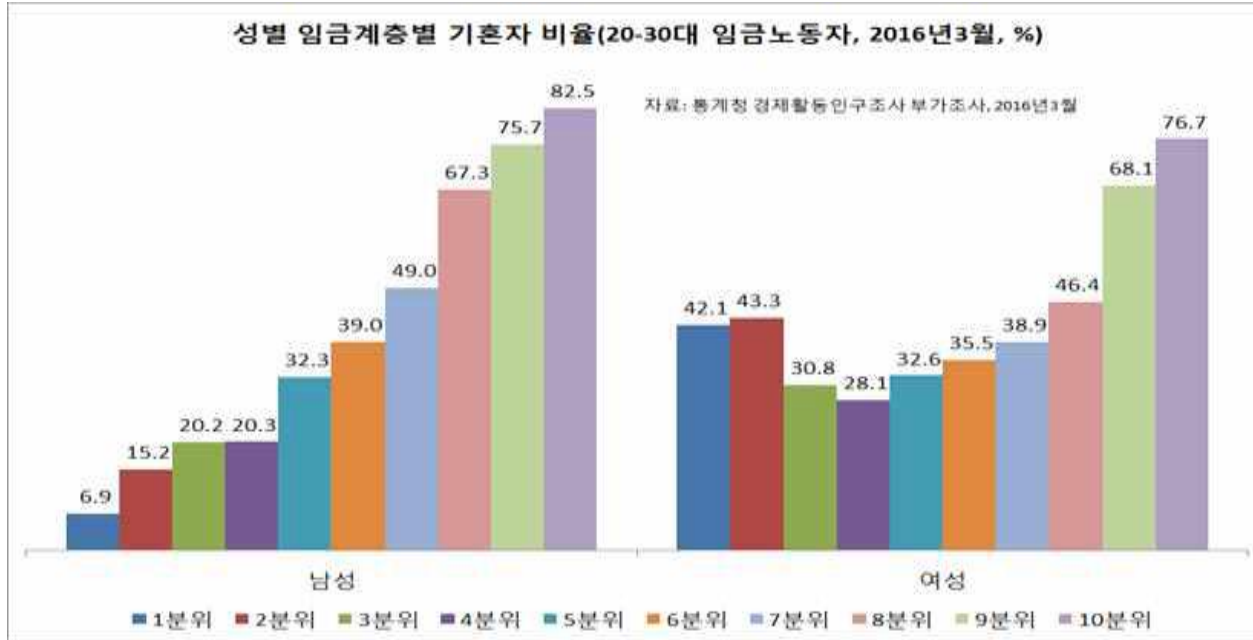
○ 청년 취업자 400만 명 중 64만 명만 좋은 일자리

- 청년 전체 915만 명 중 64만 명이 좋은 일자리

* 이 중 20-29세 취업자는 372만 명 (고용률 57.9%)/ 2015. 8. 현재

○ 결혼, 출산에 어려움

<그림 1> 20-30대 임금노동자의 성별 임금계층 별 기혼 비율



자료: 김유선(2016) “저출산과 청년일자리,”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요약

15세 이상 인구 중 비경제활동인구가 많고,
공식실업률은 낮지만 고용보조지표3은 11.0%

취업자 중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으며,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 특히 좋은 일자리의 비중이 낮음

청년의 일자리 상황이 매우 심각해서 결혼과 출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한국과 유럽의 일자리 상황 비교

유로존은 2017. 4월 9.3%

하지만,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생계가 보장(복지)되어 있음
한국에서 무급가족종사자, 일용직과 임시직 근로자로 일하는 사람의
상당수는 만약 유럽 수준의 복지혜택이 있었다면 차라리 실업자를
선택했을 것

자영업자의 상당수가 임금근로자 신분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대안으로 자기 사업을 벌인다고 보면,
한국의 실업률은 공식실업률 기준으로 보더라도 최소 20% 이상은
될 것

Chapter. 3

새 정부의 정책방향

일자리 정책방향과 주요 내용

- ① ‘정책공간 국민성장’ 일자리 포럼에서의 연설 2017. 1. 18.
 - 공공부문 81만개,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50만개 등 공약 발표
- ② 공식 선거운동 개시 첫날 대구에서의 연설 2017. 4. 17.
 - 일자리 100일 플랜 13개 과제

새 정부 국정운영의 중심

좋은 일자리 부족 문제 해결

○ 상황인식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저성장, 저출산고령화, 청년실업,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 등의 근본
원인은...

“좋은 일자리의 부족”

- 통계청 발표 청년실업률 11.2%, 체감실업률 34.2% (현경연)
청년이 취업, 결혼, 출산을 포기해야 하는 ‘헬조선’이 된 상황
- 청년일자리 부족과 세계 최저의 출산율이 계속되고 있으며,
20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기 시작.
고령인구가 전체인구의 14%가 넘는 고령사회
몇 년 후부터 대한민국의 총인구가 줄어드는 상황

국가의 근간이 무너지는 국가비상사태

○ 대응방향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비상경제조치 수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
국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과 재정능력을 총 투입해서

반드시 해결

√ 새 정부는 일자리를 최우선의 과제로 삼는 일자리 정부

1. 대통령 직속 일자리 위원회를 만들고 청와대에 일자리 현황판을 설치

2. 일자리 현황판 붙여 놓고 직접 일자리를 챙길 것임

3. 모든 정책과 예산에 대해 고용영향평가제를 전면 실시해

좋은 일자리 만들기가 국정운영의 중심이 되도록 함

문재인 대통령의 일자리 공약 주요 내용



① 공공부문 일자리를 81만 개 창출

- 정부가 당장 할 수 있는 일, 정부와 공공부문은 최대고용주

정부가 앞장 서서 일자리를 창출할 것

- 소방관, 경찰, 교사, 복지공무원의 일자리를 확충

- 현재 한국의 전체 고용(취업자) 중 공공부문 일자리 비중 7.6%

(OECD 평균 21.3%의 1/3수준)

절반 수준만 맞춰도 81만 개(3%p 증가: 취업자 2700만 x 0.03)

② 노동시간 단축으로 새로운 일자리 50만 개 창출

- OECD 최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
- 주당 52시간 법정 노동시간 준수로 20만 개
- ILO 협약에 따라 연차휴가 소진으로 새로운 일자리 30만 개
- 아이를 키우는 부모는 임금감소 없이 10~4시 근무, 유연근무제

③ 4차 산업혁명, 신성장산업 육성으로 일자리 동력을 확보

- 4차 산업혁명 추진, IT우위 바탕으로 전기차, 자율주행자동차, 신재생에너지, 인공지능, 3D 프린팅, 빅데이터, 산업로봇 등 핵심기술 분야에 적극 투자

- 기초과학과 미래기술에 집중투자, 빅데이터망을 정부가 구축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대한민국 만들기

④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을

대기업 노동자의 8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공정임금제를 통해
좋은 일자리 만들기

- 현재 대기업 대비 60% 수준에 불과한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임금을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

- 이를 위해 대기업이 하청업체에 **적당한 납품단가와 적정이윤을 보장**케 함
정부 또한 중소기업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

⑤ 비정규직 격차를 해소하여

질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전환

- 비정규직 공식 통계로만 644만 명(임금노동자의 33%),

정규직 급여의 54%에 불과

한번 빠지면 혼자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비정규직 올라미는

우리 사회의 원초적 불평등의 뿌리

- 비정규직의 입구를 사전에 차단하고
상시 지속 일자리는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하며,
정부와 지자체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점차적으로 정규직화,
동일기업 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실현
대기업과 공공부문 사내하청에 대해 원청기업의 공동고용주
책임
근로조건, 산업안전, 노조 교섭까지 공동책임을 지도록
할 것임

⑥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원 수준으로
인상

⑦ 중소기업 신규 3명 정규직 채용 시
3번째 근로자에 대한 임금 3년간 지원

그 외

- 17조원 이상의 일자리예산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 일자리 추경예산의 편성
 - 해외에서 한국으로 유턴, 고용증가 기업에 지원과 혜택
- ‘광주형 일자리 모델’ 같은 노사민정 간 대타협을 통해 적정임금을 보장 하면서
- 기업의 적극적 투자를 끌어낼 생각
- 사회적 대타협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만들 것

- 일자리가 성장이고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

좋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지갑을 두둑하게 하고, 그것을 통해 내수를 살리고,
수출과 내수가 함께 경제를 성장시키는 소득주도 성장이 바로 국민성장
의 방안

- 좋은 일자리로 청년이 내일의 꿈을 설계하고 장년이 안정적 생활을
영위하고,

- 노년이 아름다운 황혼을 누리는 일자리 복지강국 대한민국을
반드시 실현

<참고: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내역>

부문 별	신분	특징
안전/사회복지 전담/교육 등	공무원* 17.4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공무원 충원 - 공무원 연금 O
보육/요양/ 의료 등	공공기관(공단) 소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인프라투자 확대(신규 보육시설과 공공의료기관의 개설) & 민간시설의 공공부문 흡수 - 기존 복지예산, 사회보험에서 지급되는 인건비 예산 등 활용 - 공무원 연금 X
공공기관 정원 증원 (신규채용, 비정규직 & 간접고용의 정규 직화)	공공기관(자회사 포함) 소 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 정원 증원 - 기존 예산으로 인건비 활용 - 공무원 연금 X
합계	공공부문	신규 투입 + 기존 예산 활용

* 예산 5년 누계 21조 5천억 원 수준으로 가능

디지털경제 관련

- 휴먼 테크놀로지 vs. 테크노피아

감사합니다.